데스크 시각

내년에도 홍수가 온다면 막을 수 있을까?

채희종
사회부장·편집부국장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일반적으로 가십거리가 판치는 연예계에서 많이 쓰이는 마케팅용 격언이다. 하지만 이는 언제부터인지 연예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대형 뉴스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에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됐다. 빅 이슈나 핫 이슈가 생기면 이전 사건들은 관심에서 밀려나는 이슈 교체가 불가피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코로나19'는 올 초부터 현재까지 모든 분야의 관심사를 짓누르고 있는 빅 이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잠시였다. 이어 지난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및 자살 사건은 더 큰 충격파를 던졌지만 역시 오래가지는 못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여야 쟁점이 되는 등 화젯거리였지만 수도권을 제외하면 생각만큼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올 8월 코로나19와 맞선 유일한 여름철 핫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후 재난인 홍수와 이어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폭염일 것이다. 홍수로 인한 희생자가 며칠 만에 40명을 넘었고, 재산 피해는 광주·전남만 6000억 원에 이르는 등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록했다. 홍수가 두려운 것은 수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 손실로 인간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자연재해 극복 과정

게다가 예측을 불허하는 자연재해는 인간의 눈앞에 재앙의 현장을 펼쳐 보이는 잔인성 탓에 더 큰 충격을 준다. 눈앞에서 자식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가고, 이웃 주민이 산사태에 깔려 숨지는 광경을 목도하는 심정은 고통이나 공포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처참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예측 시스템과 안전관리가 작동되는 첨단 과학 시대임에도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어찌할 수 없다는 인간의 패배감과 무기력감, 특히 앞으로도 재난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는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는 자연재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동양에서는 인류의 태평성대를 요순시대로 꼽아 왔다. 성군인 요임금과 순임금이 백성을 평안하게 했다. 왕위 또한 세습하는 대신 인재를 추천받아 물려주는 선양(禪讓)이라는 정권 이양 방식을 택했다. 조선시대 사림들은 태평성대의 근거를 복지와 정치 제도의 우수성에서 찾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고대사와 전설에서의 요순시대는 두 임금이 백성을 위해 홍수와 폭염 등 자연재해를 다스리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더욱이 요·순을 이은 우임금은 홍수를 잘 다스려 선양을 통해 왕위에 올랐다는 기록도 있다.

요임금은 이상적인 왕으로 꼽히지만 가장 많은 재앙에 시달렸다. 하늘에는 열 개의 태양이 떠오르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요임금은 하늘에 기도해 활의 신 '예'가 태양 아홉 개를 활로 쏴 떨어뜨리도록 해 폭염(가뭄)을 물리쳤다. 하지만 22년간이나 시달린 홍수 예방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황하 범람을 막기 위해 치수전문가 '곤'을 등용했는데, 곤은 둑을 쌓아 물길을 가로막는 방법만으로 9년을 노력했으나 실패를 거듭했다. 이에 순임금은 곤의 아들인 '우'를 고용했으며, 우는 둑 대신 수많은 물길을 뚫고 강물이 바다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 홍수를 막았다. 결국 요순시대가 태평성대인 이유는 자연재해로부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즈음에서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는 최근 역대 최장기간에 이르는 장마와 집중호우(강우량 600mm 이상)로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다. 애초 폭염 일수와 열대야가 지난해보다 늘어 기록적인 폭염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와는 정반대였다. 장마 일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난 데다 강우량도 기상청 예보 수준보다 크게 늘면서 피해가 커졌다. 홍수 조절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크고 작은 둑과 제방이 무너지면서 구례처럼 물에 잠긴 마을이 한둘이 아니었다. 여기에 도심 곳곳의 하수관로와 영산강 등 강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수문 등의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역류가 발생, 농경지는 물론 아파트까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기후변화 예측 능력이 관건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수는 없다. 다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자연재해는 더 잦아지고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내년에도 광주·전남에 홍수가 발생한다면 과연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자연재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기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무엇보다 인재로 인해 피해를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 발생 시 매뉴얼과 시스템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재난은 선제적 대응이 있어야만 예방할 수 있다.

은펜칼럼

공공 도서관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심명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순회사서(광산구)

공공 도서관을 우리는 사회적 공공재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회와 동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중추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 변화에 맞춰 도서관 또한 변화해 나가야 된다. 앨빈 토플러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은 "과거와 현재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래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열려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즉 과거와 현재의 맥락을 이어주는 예측 가능한 사회 변화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또 다른 사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몇 달간 우리는 예상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긴박한 상황을 겪고 있다. 팬데믹으로 번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은 누구도 예상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인 것만은 분명하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2일을 전후로 국내 공공 도서관들은 이용자에 대한 열람 및 방문 서비스를 중단하고 도서관을 휴관했다. 그 후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에 따라 무기한 임시 휴관과 부분 개관을 반복 시행하게 되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국가의 경우 예외 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행에 맞춰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도서관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사회적 공공재로써 이용자를 위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지속했다. 이처럼 도서관이 사회적 위기 상황의 극복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또한 이러한 감염병은 미래에도 닥칠 수 있으므로 확산 상황 등 환경의 변화에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 기관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과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용자의 경우 도서관 업무의 강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면 안 되니 문을 닫고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안전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또 다른 형태의 소극 행정 또는 기피 행정은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휴관을 하게 되었으나 도서관이 휴관한 상황에서 모든 도서관 업무 역시 중단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휴관 기간 동안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대이용자 서비스가 아닌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장서 구입 정리 등의 수서 정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용자가 있을 경우 시행하기 어려운 환경 정비 및 장서 점검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도서관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대이용자 비대면 서비스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공하고 있는 이용자 비대면 서비스는 스마트 도서관, 드라이브스루, 도서 배달, 예약 대출, 서점 대출, 전자책, 온라인 콘텐츠, 오디오북, 비디오 등과 전자화된 자원을 통한 열람 대출이다. 대출 대상 자료의 추가 대출과 대출 한도 및 대출 기간 등도 확대하였다.

이밖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영유아 보호자, 한부모 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로 도서를 배달해주는 도서 배달 서비스를 시행, 가정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했다.

따라서 휴관 상황에서도 도서관 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연장으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증가한 만큼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는 증대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용자 요구의 반영을 위해서 도서관은 이용자와 보다 더 긴밀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앞으로도 수십 년간 감지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탄력적인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도서관은 사회 변화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언제 멈출 줄 모르는 계속적인 유행을 전제로 차질 없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재난 대비를 위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안전 관리 매뉴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 고

국가 균형 발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서둘러야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완료된 현시점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여전한 실정이다. 2019년 말 현재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0.0%를 차지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와 젊은 고급 인력, 가처분 소득, 사업체수, 지역 총생산액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교육·의료·문화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도 점차 확대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리쇼어링(reshoring :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장 총량제' 완화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균형 발전 정책'이 후퇴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국가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국가 균형 발전 2단계를 선언하며,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방안으로 혁신도시 시즌2와 농산어촌 3·6·5생활권(30분 내에 기초생활 서비스, 60분 내에 복합 서비스, 5분 이내에 긴급 연락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올해 4·15 총선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대 의제를 제안하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후퇴 내지는 지연되면서 수도권은 고도 비만, 비수도권은 영양 실조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비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헌법 가치이자 국민의 염원인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신균형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면서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기존 혁신도시를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이들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한 미래형 도시이기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는 수도권 과밀과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로 인한 국민 통합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넷째, 분산·분업·분권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추관리 기능의 지방 분산을 통해 지역에 고급 일자리를 확보하여 인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매로 하여 지역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 도시 또는 지구를 조성하여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소홀히 한다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피폐화는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지역 경제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에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젊은 층의 지방 탈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와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이 성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社 說

구시청 '불야성' 지금 그리 흥청망청할 땐가

최근 광주 지역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민들이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다. 코로나로 초비상이 걸린 상황 속에서도 유흥가가 밀집한 상무지구에서는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유흥주점에서 저녁은 물론 새벽까지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드러난 사실이다.

문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온 상무지구 유흥가는 이제 손님들이 뜸해졌지만 대신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일대 유흥가는 여전히 붐비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주시가 시내 전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휴업)을 내렸음에도 시내 유명 호프집,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주말 밤과 임시 공휴일 연휴를 즐기려는 손님으로 붐볐다. 일종의 '풍선 효과'인 것인가.

본보 취재진이 돌아본 결과 시내 최대 유흥가인 상무지구 일대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유흥업소가 줄줄이 폐쇄되면서 화려한 네온등이 꺼져 골목은 어둡기까지 했고 식당도 손님이 없어 썰렁했다. 반면 동구 구시청 사거리 일대는 불야성을 이뤘다. 특히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유흥주점 영업 금지령'에 해당되지 않는 헌팅 포차에는 많은 손님이 북적였다.

임시공휴일이었던 17일 새벽 구시청 사거리 일대 주점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헌팅포차 앞에는 대기 행렬 길이도 수십 미터에 달했고, 입장까지 한 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로 붐볐다. 출입 명부 작성도 완전하지 않은 데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손님은 많지 않아 방역 당국의 경고가 무색해 보였다. 마스크 끈만 귀에 걸치고 코와 입을 내놓은 채 앉아 있는 '턱스크' 젊은이들도 많았다.

오갈 데 없는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 업소를 찾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비상사태다. 폭염 속에서 방호복을 입고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한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처럼 흥청망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섬진강 물난리 '셀프 조사' 납득할 수 있겠나

구례·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초유의 물난리 원인 규명 작업이 환경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셀프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홍수 피해를 키운 장본인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는 환경부가 자체 조사에 나설 경우 자칫 면피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제 브리핑에서 "환경부는 최근 집중 호우 당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 살피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정부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돼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조사위의 임무는 홍수 때 댐 방류가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게 핵심이다. 조 장관은 댐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해 지역 주민과 정치권에서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셀프 조사는 부적절하다'며 비판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 자체 조사로 결론을 내린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리 만무하다"며 '환경부 조사는 면피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는 홍수 통제 권한을 쥐고 있는 영산강 홍수통제소, 댐 관리자인 한국 수자원공사, 심지어 잦은 오보를 낸 기상청도 모두 환경부 소속 기관이거나 산하 공기업 또는 외청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 장관은 구례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한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차제에 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특별기구를 꾸려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無等鼓

4대 강 사업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난데없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 강 정비 사업'이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이번 수해 원인으로 4대강 사업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민·관·군이 폭염 속에서 수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건만, 정치권 공방은 쉴 새 없이 이어진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 때문인지 최근 재평가 논쟁도 한창인데 통합당 내 이명박계 의원들이 불을 지폈다. 4대 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강바닥 준설, 홍수 조절지 및 강변 저류지 건설, 노후 제방 보강, 낙동강·영산강의 하굿둑 배수문 증설 등이 주요 사업이었다.

당시 환경단체 등은 하천 생태계를 해칠 수 있는 보 설치 반대, 본류 대신 지류·지천의 치수 사업 등을 요구했다. 이번 폭우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4대 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전 의원은 "4대강 16개 보를 건설하지 않았으면 나라의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다"라며 보의 홍수 조절 능력을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구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섬진강도 4대 강 사업에 포함됐으면 홍수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반면 하천학회나 전문가들은 보 때문에 수위가 오르고 수압이 높아져 제방이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에선 제방이 약한 탓에 붕괴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들의 상반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가 설치된 낙동강과 설치되지 않은 섬진강 모두 제방이 붕괴됐다는 점을 보면 이번 수해 원인으로 보를 지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민이 물난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서로 '네 탓'만 하는 것은 보기 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의 홍수 조절에 대한 실증·분석을 지시한 만큼 이번에 정부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4대 강 및 지류·지천 등에 대한 홍수 대비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